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첨단업종 지방 피해 분석

광주·전남 2011년 고용 4천여명 줄어

부가가치 광주 8천6백억·전남 2천억 감소

비수도권 생산액 피해 88조3천억 달할 듯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9일 내놓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결과는 그동안 어림짐작으로만 추정해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피해 규모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협의체 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김문연(울산발전연구원)·이춘근(대구경북연구원)·마상열(경남발전연구원) 박사 등 연구진은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진입 규제가 철폐될 경우 비수도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2006년 사이 25개 산업의 종사자수와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성장률을 산출한 뒤 해제 이후 지방의 각 변수의 증가율이 5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해 피해 규모를 분석했다.

25개 첨단 업종은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의료용기기, 광섬유 및 광학 요소, 자동차부품, 항공기·우주선 등이다.

◇첨단업종 수도권 집중도=지난 2000년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수는 51.0%, 생산액은 55.4%, 부가가치는 55.6%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는 생산액 기준 전국의 48.8%, 부가가치는 49.7%를 점유,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종사자 수는 38.2%를 차지했다. 부가가치가 생산액이나 종업원 수 비중보다 큰 것은 고기술 ICT(정보통신기술)나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돼 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25개 첨단업종의 최대 집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집중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변화=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진입 규제가 지속되면서 2006년에는 수도권의 비중이 종사자 수 48.2%, 생산액 39.8%, 부가가치 42.7%로 낮아졌다. 대신 충남과 경북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00년~2006년 사이 이들 업종의 지역별 증가율은 종사자의 경우 서울은 -0.6%, 인천은 -1.4%, 경기는 5.2%를 기록한 반면 전남은 13.5%, 충남은 10.7%, 강원은 10.6%로 대폭 증가했다.

생산액도 전남이 2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은 22.9%, 충남은 22.2%를 각각 기록했으며, 부가가치 역시 전남 22.4%, 충남 20.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가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추세의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11년 수도권의 비중은 종사자 수 45.0%, 생산액은 24.4%, 부가가치는 29.6%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각각 55.0%, 75.6%, 70.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2006년 기준 25개 업종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 유형 고정자산, 생산액, 부가가치 등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가 1.1~2.3%, 전남은 0.3~0.6%에 불과해 첨단산업분야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규제 철폐로 인한 비수도권 피해=25개 업종의 공장입지 규제가 해제돼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의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각 부문의 성장률이 2000~2006년의 50% 수준으로 낮아지면 2011년 수도권 비중은 종사자 수 54.4%, 생산액 50.6%, 부가가치는 5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피해는 종사자 수 8만5천570명, 생산액 88조3천963억원, 부가가치 35조7천4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종사자 수에서 충남(1만8천737명), 경북(1만7천286명), 경남(1만2천917명)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광주의 경우 종사자는 3천285명, 생산액은 2조2천64억원, 부가가치는 8천608억원이, 전남은 609명, 5천752억원, 1천996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은 첨단업종 비중이 여전히 낮은 탓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적도를 높여 비수도권의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지방의 첨단업종 집적지가 연구·개발과 인력면에서 입지요인을 강화할 때까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3년후 성장률 50% 둔화시 지역별 피해 규모

(단위:명, 백만원)

구분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부산	5,034	2,188,916	916,376
대구	6,700	4,764,521	1,621,125
광주	3,285	2,206,420	860,835
대전	2,103	1,644,050	756,070
울산	5,632	6,846,158	1,536,188
강원	1,333	1,057,306	374,538
충북	9,034	8,014,308	3,764,957
충남	18,737	25,018,889	10,385,083
전북	2,900	1,677,008	568,180
전남	609	575,286	199,654
경북	17,286	23,352,928	10,912,427
경남	12,917	11,052,598	3,853,767
비수도권	85,570	88,396,386	35,749,202

■25개 업종의 2000~2006년 증가율

(단위:%)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생산액	부가가치
서울	2.4	-0.6	-2.4	3.7	4.6
인천	1.9	-1.4	-0.6	5.5	4.8
경기	5.5	5.2	8.5	2.1	4.0
부산	-0.7	5.9	17.3	13.0	13.6
대구	-0.3	4.9	5.0	14.2	11.6
광주	13.1	2.3	-4.0	13.2	10.5
대전	8.5	5.7	5.4	10.4	12.5
울산	5.8	7.1	10.6	22.9	12.8
강원	24.7	10.6	9.4	12.6	10.5
충북	8.0	7.0	7.2	10.5	5.5
충남	9.3	10.7	24.8	22.2	20.6
전북	8.8	2.3	7.0	5.6	8.3
전남	6.7	13.5	14.2	27.7	22.4
경북	4.6	6.0	6.7	10.2	13.7
경남	5.1	0.3	5.2	7.8	9.7
전국	4.6	2.5	10.0	8.1	8.7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2 광역경제권 신 지역분할 정책"

지역 국회의원, 한승수 총리 방문 폐지 요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3명은 29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방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철폐와 광주·전남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각종 사업의 추진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주승용·박주선·최인기·유선호·조영택·이낙연·김영진·김성곤·우윤근·강기정·김영록·김재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 의원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인구와 산업집적도를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했는데 이는 큰 문제"라며 "호남과 영남의 선도 프로젝트의 경우도 호남은 계속사업, 영남은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는 신규사업들이어서 차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폐기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분명한 당론"이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지만 9개월째 조성위원장도 공석이 아니냐"고 따졌다.

최인기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으로 또다시 호남을 차별하고 있다"며 "권역을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구분한 것도 문제며, 옥상옥의 기구를 두어 추진하려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단위로 설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선도산업의 편중이나 여론 수렴절차도 없었던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조급증 때문에 과욕을 부려 이러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특히 지방의 상실감에는 너무 둔감하다"고 꼬집었다.

김영진 의원도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신종 지역분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조선소 지원 문제와 관련, 김영록 의원은 "전남지역의 조선산업은 2만4천여명의 고용에, 지역산업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며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까지 해 놓고 인제 와서 금융지원이 막혀버려 도크 건설조차 못하고 있다"고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 외에도 ▲문화콘텐츠(CT) 기술 연구원 광주 건립 ▲J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광주 R&D특구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5+2 개발계획은 국가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정감사 연중 실시하자"

이용섭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산 을)이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일정과 관계없이 상시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이용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를 구체화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

"5+2 영남 편중·호남 소외 우려"

박재순 한나라 최고위원 재검토 촉구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5+2 광역경제권'과 관련,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5+2 광역경제권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경제권이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낙후 지역을 산술적인 인구로 나누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아 수도권 비대, 영남권 편중, 호남권 소외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